

키워드로 본 중국통상과 제주경제

신라대학교 국제학부 김 형 근

최근 중국의 경제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로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의 활황을 보이는 양상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글로벌 악재 및 경제성장 동력이 변곡점에 이르러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중국정부는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성장방정식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새로운 성장모델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황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해외수출 지원에 힘입은 수출 드라이브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에 봉착하면서 더 이상의 수출 확대 통상정책에는 한계를 보임에 따라 중국정부는 새로운 통상정책 구상을 실천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 제주도의 시각에서 중국 통상정책의 큰 줄기를 짚어보고 그에 맞는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의 통상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시각으로 나눠서 접근해 볼 수 있다. 크게 무역 측면, 산업 측면, 투자 측면에서의 시각이 그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3가지 측면에서의 시각으로 주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중국 통상정책을 풀어 보고자 한다.

무역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중국의 통상 정책은 경제적 영향력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FTA(자유무역협정)나 RCEP¹⁾(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양자 또는 다자간의 무역협정을 말한다. 중국은 FTA나 RCEP 등을 통해 대외개방을 촉진함으로써 세계경제에의 영향력

1)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확대를 꾀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 영향력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과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하였다. 2003년 홍콩 및 마카오와의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를 필두로 2014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스위스 등 10여개 서방 선진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시장개방 정도가 갈수록 넓어져 외국기업들의 중국 진입의 문호가 대폭 확대되었다. 2007년까지는 주변국 및 개발도상국들과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였고, 협상 범위도 상품시장에 중점을 두는 비포괄적 협상의 특징을 보였으나, 2008년부터는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FTA도 타결하는 등 협상 범위를 투자와 서비스업까지 넓히는 포괄적 협상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FTA 특징 및 전략〉

발효년도	국 가	특 징
2004~2005	홍콩, 마카오, ASEAN	주변국, 비교적 낮은 수준
2006~2007	칠레, 파키스탄	비교적 낮은 수준, 비포괄적 협상
2008~2009	뉴질랜드, 싱가포르	선진국, 포괄적 협상
2010~2011	페루, 대만, 코스타리카	상품시장 대폭 개방
2012~2015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	선진국, 비교적 높은 수준, 포괄적 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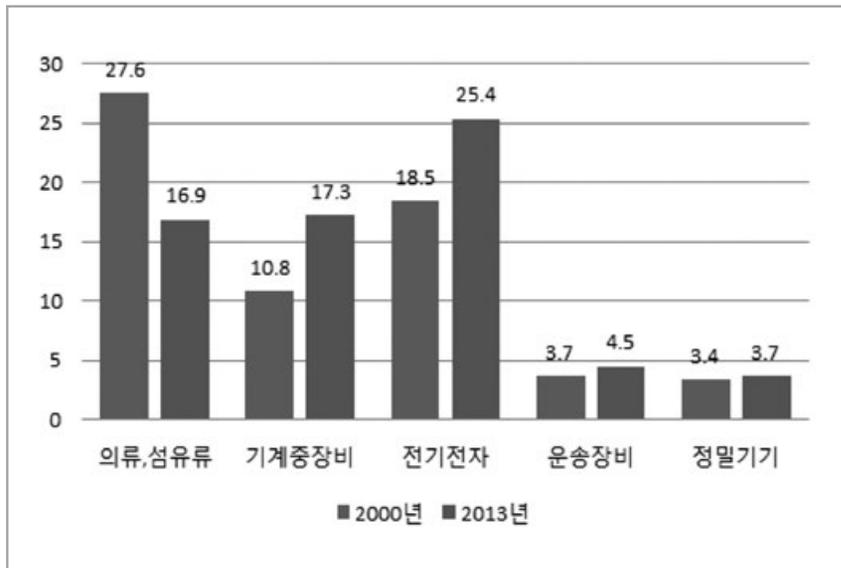
자료 : 中國 商務部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재정리

한편, 중국정부는 원거리 영향력과 함께 아시아 국가 중심의 RCEP 타결을 통해 역내에서 중국 중심의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여 추진 중인 RCEP은 세계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특히 동아시아 중심의 RCEP 내에서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2010년 이후 매년 15%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중국의 전체 교역액 중 RCEP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역내외에 적극적인 공세를 펴는 통상정책을 구사하며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적 측면에서의 중국 통상정책은 가공무역 제한 등을 통한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다. 수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하이테크 제품,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지난

2010~2013년 사이 의류, 섬유 등 저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비중은 10.7%p 감소한 반면 기계중장비, 전기전자 등 기술제품 수출비중은 6.5%p, 6.9%p 씩 확대되었다.

〈중국 주요품목 수출액 비중 변화〉



자료 : 중국해관총서 웹사이트

특히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의 일환으로 가공무역²⁾의 제한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출 품목의 고급화, 고기술화,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현실화 하고 있다. 과거 80~90년대에는 가공무역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며 외국기업의 중국 진입 장벽을 낮춰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하였다. 1981년 중국의 가공무역 규모는 26억 달러로 전체 교역의 6%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에는 1,731억 달러를 기록하며 가공무역의 비중이 사상 최대치인 53.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9년부터 가공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시행 세칙이 발표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가공무역을 본격적으로 제한하면서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규정함과 동시에 금지품목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가공무역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며 2008년부터는 일반무역 비중보다 낮아졌다. 2010년부터는 총 1,803개 가공무역 품목에 대해 수입, 수출 또는 수출입을

2) 가공무역이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원재료 및 보조재료, 부속품, 소재, 부품, 포장물 등을 국내기업이 가공 또는 조립한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활동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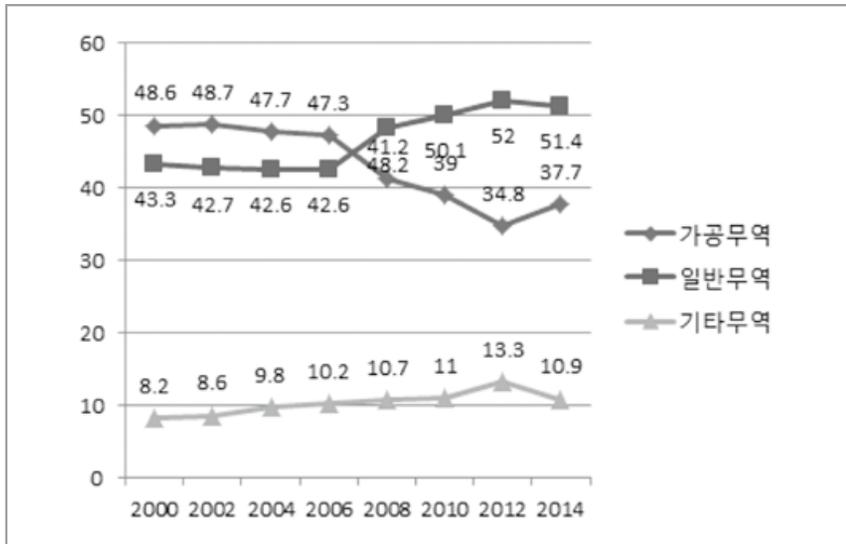
금지하여 2000년대 중후반부터 가공무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4년 가공무역 규모는 8,842억 달러로 전체 수출입 금액 대비 37.7%로 2012년에 비해 그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는 세계 경기 하락으로 인한 일반무역액 축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중국 가공무역 금지·제한 정책〉

년도	주요내용
1999	가공무역 관련 제품을 허용, 제한, 금지 등 3부류로 나누어 관리
2004	비료, 중고기계, 중고전자제품 등 금지품목 341개로 지정
2006	희토류, 철광석, 원목, 철합금광 등 금지품목 804개로 지정
2007	강철관, 철파이프, 농약, 가죽제품 등 금지품목 1,140개로 지정
2008	광산품, 화공품, 철강제품, 식음료 등 금지품목 1,816개로 지정
2009	금지품목 1,759개로 지정
2010	금지품목 1,803개로 지정

자료 : 연도별 중국 가공무역 금지상품품목 내용 정리

〈중국 가공무역 비중 추이〉



자료 : 중국해관총서 웹사이트

마지막으로 투자 측면에서의 통상정책을 볼 수 있다. 투자 측면에서는 크게 In-bound와 Out-bound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In-bound 투자 유치 전략은 외국인

에 대한 중국 투자유치 정책이다. 중국은 산업성장 및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해 상하이자유무역구(FTZ)와 같은 특별관세 지역을 개발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 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보세물류구역, 보세항구와 같은 산업클러스터 등 수출 항구 배후단지를 개발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여 무역규모 확대, 서비스업 고도화, 기술교류 확대 등을 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항구와 맞닿은 특별관세지역을 건설하여 제조업 고도화와 서비스업 육성을 가속화 한다는 속셈이다. 특별관세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이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특별관세지역에서 벌어지는 화물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거나 화물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자유로운 제조, 연구개발, 물류유통 등 경영활동도 보장하는 기업의 높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특별관세지역 구분〉

구분	주요특징	설치현황
보세구	- 1990년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桥)보세구 설치 - 구역 내 화물 면세, 수출입 자유 보장 - 보세창고, 가공·중계무역, 제품전시, 금융서비스 기능 활성화	24개
수출 가공구	- 2000년 텐진수출가공구 설치 - 수입면세, 원료수입 보세, 구역 내 입주시 임대료 감면 - 수출가공, 보세물류, R&D, 테스트 등 기능 부여	58개
보세 물류구	- 2003년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桥)보세구 내 보세물류구 설치 - 구역 내 화물면세,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등 - 가공, 중계무역, 테스트, 국제배송, 제품전시 기능 활성화	10개
보세항구	- 2005년 상하이 양산(洋山) 보세항구 설치 - 외국화물 보세, 구역 내 화물유통 부가가치세 등 면제 혜택 부여 - 가공·물류·항만기능 일체화, 국제환적, R&D 기능 활성화	14개

자료 : 中国 国务院, 商务部 웹사이트 자료 정리

특히 2013년 10월에는 종합보세물류·금융개방 지역인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FTZ : Free Trade Zone)가 설치되었다.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는 와이가오차오(外高桥)물류단지, 와이가오차오(外高桥)보세구, 푸둥(浦东)공항종합보세구, 양산(洋山)보세항구 등 28.78km에 달하는 4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무역의 자유화

중심의 기존 보세구에 서비스 및 투자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해운,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도 확대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산업간 시너지 극대화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로는 Out-bound 투자 전략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말한다. 현재 중국은 세계 1위 외환보유국이다.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에너지, 하이테크 산업, 선진 유통망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의 활용 가능한 외환보유액 중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위탁운영 자금과 해외투자 가능 가계자산은 2012년 기준으로 약 5,6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 GDP의 약 7%, 외환보유액의 약 17%에 달하는 수준이다. 중국의 해외투자 기관으로는 위탁운영 자금의 경우 중국투자공사(CIC)와 중국외환관리국 화안공사(SAFE Investment Company Ltd.), 가계자산은 중국사회보장기금(NSSF)과 국내적격기관투자자금(QDII) 등이 있다.

〈해외투자 가능한 차이나머니 추정치 (2012년 기준)³⁾〉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위탁운영자산		가계 자산		합 계
	중국투자공사 (CIC)	외환관리국 (SAFE)	중국사회 보장기금 (NSSF)	중국적격 투자기관 (QDII)	
분야별 규모	4,820.0	5,680.0	1,374.0	851.0	12,725.0
차이나머니	2,410.0	2,840.0	96.2	255.3	5,601.5
GDP 대비 비중	2.9	3.4	0.1	0.3	6.8
외환보유액 대비 비중	7.3	8.6	0.3	0.8	16.9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3-15(통권 532호, 2013.3.29. 발간)에서 발췌

지난 10여 년간 중국의 해외투자대상 산업은 주로 자원 확보를 위한 광산업, 금융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다. 광산업 직접투자는 2003~2012년간 연평균 33.1%씩 증

3) 1. 해외로 투자되는 SAFE 투자액은 CIC 자금과 동일한 비율(50%)로 가정함.
 2. NSSF 해외투자는 규정상 전체 운영자산의 20%이나, 실제로는 7% 정도 투자됨.
 3. QDII 자금은 전체 운영자산 중 홍콩으로 투자되는 약 70%를 제외한 30%로 가정
 4. 2012년 중국 GDP 총액은 8조 2,563억 달러
 5. 2012년말 기준 중국 외환보유액은 3조 3,116억 달러

가하여 135.4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의 15.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임대서비스, 도소매판매업, 금융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하여 2012년 기준 각각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30.5%, 14.9%, 11.5%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은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중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도모하고자 통상전략을 다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FTA 등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중국시장을 개방함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우리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는 한-중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동시에 대응방안 수립이 시급하다. 한-중 FTA는 포괄적 범위의 자유무역협정이므로 중국 상품시장 및 서비스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제주의 특화상품을 중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여 중국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방식과 함께 독자적인 마케팅 능력을 키워 중국시장에 직접 런칭할 수 있는 업체 지원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한류로 인한 친근한 제주 이미지 및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은 중국의 환경오염 및 더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고 있는 중국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요소로써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특히, 제주의 깨끗한 물, 화장품 등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의 공격적인 경제영토 확장이 제주의 농산물, 수산물 등 대중국 취약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소한의 제도적인 보호막 설정은 필요하다. 중국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가 추진됨에 따라 제주의 대중국 투자도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모색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공무역 축소로 인한 중국진출 제주기업의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중국을 저렴한 노동력과 임대료를 활용한 생산요소 추구형 투자 지역으로 삼을 수 없다. 게다가 단순 임가공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의 투자도 중국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이제는 옛말이 되고 있다.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비시장으로 인식하고 최종 소비재 판매로 이뤄질 수 있는 투자형태로의 중국 진출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중국 출장 몇 번, 지인들과의 술자리 몇 번으로 중국에 대한 이해를 다했다고 오관해서는 중국투자의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중국 알기가 필요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무원, 학계 및 산업계 중국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의 외국직접투자를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차이나머

니로 불리는 중국자본을 적극 활용하되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투자유치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중국자본이 제주로 유입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제주 부동산 판매는 깨끗한 우리 제주의 국부를 유출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직까지 제주 부동산 중 일부에만 중국자본이 유입되었다는 단일한 판단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중국자본은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지분투자를 통한 배당금 취득 목적의 Hands-off형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기술력과 잠재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제주기업과 중국자본을 매칭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형성된다면 제주와 중국자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투자 전담부서 또는 지원부서 확대·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